

뉴스초점 지방선거 200일 앞으로...민주당 경선을 결정 왜 늦어지나

정국경색에 논의조차 못해

혁신위 당원권한 확대안
최고위 의견차 의총 이관
결론 해 넘길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가 2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규정을 확정하지 못해 입지자들의 예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당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선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이 경선불도 모른 채 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당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최고위원회로 올라온 경선안은?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최고위원)가 만든 지방선거 경선방식은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혁신위는 시·도지사 후보자 경선의 경우, 제1안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50%, 여론조사 포함 가능), 전국대의원(1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10%)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 논의했던 안에 비해 당원 비중이 낮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부대의견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30%, 여론조사 포함 가능),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20%)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40%, 여론조사 포함 가능),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10%) 등 두 가지 경선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시·도의원 후보자 경선의 경우는 해당 지역구 지역대의원(20%), 권리당원(50%), 일반당원(30%)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당원에게 선택권을 줬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도 해당 시도당 전국대의원(50%)과 당원공천선거인단(50%, 해당 시도당 당원들 중 추출)이 참여하는 경선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의 경우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서 보고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 외에도 ▲예비경선(컷오프) 폐지 ▲경선 모바일 경선 폐지 ▲전략공천 15% 이내 등 공천방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
◇경선을 확정 왜 늦어지나=상향

식공천제도혁신위는 지난 9월말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방식 등을 담은 상향식 공천제도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 최고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경선률에 관한 최고위원 간 의견차가 심했던 탓이다.
이후 솔하게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지방선거 경선률에 대한 논의는 한 달반이 넘도록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어 강경투쟁 속에 지방선거 경선률 논의는 한가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12일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도 공천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의견차와 현 시국의 엄정함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13일 “정국 경색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경선률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는 당분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는 연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정보원 ‘빛의 정원’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정보원 건물에 있는 가장 ‘빛의 정원’의 조형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물에 원통형 공간을 만들어 빛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설계의도가 반영돼 있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통곡의 필리핀’에 광주의 온정을

광주YMCA·국제교류재단 등 각계 태풍피해 돕기
‘희망나무’ 구호팀 파견 본보 박정렬기자 동행 취재

‘괴물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광주지역 각계 각층의 따뜻한 온정이 모이고 있다.
(사)희망나무(이사장 류한호)는 1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의료진이 중심이 된 필리핀 긴급구호팀을 파견한다. 〈관련기사 5면〉
긴급구호팀은 박석인 광주 첨단 미르치과병원 원장을 팀장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인 윤장현 광주아이안과 원장, 유재신 광주시약사회 회장, 서일권 (사)희망나무 국

제협력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에서 탈출한 이주민들이 1만명 넘게 물려든 세부를 찾아 오는 18일까지 부상자 치료와 의약품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친다.
광주일보 박정렬 기자는 이들과 함께 동행해 필리핀 현지의 피해 모습과 광주 구호팀의 활약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윤장현 원장은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광주 5월 정신’을 살려 필리핀에 연대와 나눔의 활동을 실천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대학 병원들도 추가로 필리핀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할 계획이다.
광주YMCA는 지난 2007년 자매결연으로 두터운 우정을 쌓은 필리핀 마닐라 YMCA를 통해 위로금 1000달러를 14일 전달했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2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사)이주가족복지회와 함께 필리핀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전주교 광주대학교구 이주민회관과 필리핀인들로 구성된 ‘광주 필리핀 공동체’도 성금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도 광주시민들이 후원해준 의류·생수·생필품 등을 모아 태풍 피해지역으로 보낸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를 본 베트남에도 교민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고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민주 “선거개입 안보교육”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

민주당은 14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기정·박범계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박 보훈처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편향적 안보교육을 주도했다”며 “명백한 대선개입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처장이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시민단체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

한 교재를 만들어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처장은 교육용 DVD를 활용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이 지난해 국제외교안보포럼 등에 참여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민주당 또 김용관 전 서울청장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기도 했다. 당 국정원 대신 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은 지난 9월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수사 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며 “이 문서에는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의 영장신청 기각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 외에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

군산세계철새축제

Gunsan International Migratory Bird Festival

2013.11.22 Fri - 24 Sun
금강습지생태공원/철새조망대

정부 3.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군산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주최 군산시 주관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meo 안경부